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191

JCCT 2021-5-22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up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o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본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후,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 중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은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ideal-type)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현실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보편주의, 선별주의,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explore potential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upon such subjects as definitions of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and welfare attitudes has been done.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 several major results. First and foremost,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such as political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free education and gratuitous child care, categorized as political-social sta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However, it was unexpected results that those variables which have been found signif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in previous literature, that is to say age,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especially were not to be found significant in predicting welfare attitudes toward universalism vs selectivism. There could be many underlying causes for this result including measurement errors, and this study strongly speculates that the division between universalism vs selectivism itself exists only both in purely conceptual level and in political rhetoric and therefore, universalism or selectivism as people’s consistent and logical attitudes or consciousness may simply not exist at all.

Key words : universalism, selectivism, hierarchical regression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접수일: 2021년 3월 7일, 수정완료일: 2021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7일

Received: March 7, 2021 / Revised: April 10, 2021

Accepted: April 27, 2021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I. 서론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계기로 한국사회에 등장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쟁은 비단 학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와 보수 진영은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이러한 논쟁의 귀착점은 결국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추상적 이념이나 윤리적 관점 또는 ‘공짜점심, 재벌급식’ 등의 슬로건에서 드러나는 선동적 관점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가 가져왔던 질문들은 첫째,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는 어떠한 상(象, image)으로 다가오고 있을까? 둘째, 만약 한국인에게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상(象, image)이 존재한다면 한국인들은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 등의 단어가 지시하는 정확한 의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지지 정도,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 영역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과거 문헌 검토 및 개괄적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학계의 주요한 논쟁을 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론 정치 측면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에 대한 검토 및 복지태도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이다.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을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의 한국인들에게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구분이 정확한 개념적 토대와 정책의 구체적 실체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인들이 갖는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에 대한 인식과 지지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에 쓰일 자료는 2019 복지패널 자료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리는 과거 연

구들에서 비교적 잘 정리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학계의 공통적 개념정의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먼저 보편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 운용의 원칙 또는 모든 시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이념을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추상적 선언 수준의 개념 정의를 제외한다면 실제 어느 국가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은 발견할 수 없다. 즉, 시민들 간의 차별을 제도화하지 않으며 빈자를 포함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다른 시민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수급자격을 사회적 시민권으로부터 도출시키고자 하는 보편주의의 정의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 설계의 구체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 또는 정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가 사회복지 급여를 사회적 권리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복지급여를 강조한다. 이 때 개인의 욕구는 정부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게 된다. 선별주의에 대한 선호는 복지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예컨대 저소득 가구 및 개인)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공공지출의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산 조사에 기반 한 복지급여 수급자격 부여를 선별주의로 칭하는 것으로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은 2010년 이전에도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학교 무상급식으로 발현된 복지체제 이슈가 마침내 한국의 보수 vs 진보의 담론투쟁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각 진영은 복지체제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수사 그리고 가치체계를 생산해 내게 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담론정치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언론이었다. 많은 매체들이 당시에 쏟아낸 기사제목, 기사, 사설 등에 나타난 수사(修辭)들은 복지체제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빈번하게 나타난 자극적 표현들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지점을 과연 언론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하

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케 하였다.

2. 복지태도 및 결정요인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복지태도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과 그것들에 대한 조작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복지태도는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에 대한 전반적 가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성향, 사회 내 불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실천의지, 복지비용과 조세문제에 대한 태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태도 등 개념적으로 일정 수준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하위구성영역을 포함하고 있다[9].

다음으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자기이해 요인, 자신의 계급 또는 계층 요인, 그리고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자기이해 요인은 인간본성에 대한 전제를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관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개인의 복지태도가 자신의 속한 계급이나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에 따르면 복지제도란 시장경제의 작동에 의해 파생된 계급 또는 계층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며 따라서 제도의 결과와 그것에 대한 태도 역시 계급과 계층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평등주의와 사회적 연대의식이 국가의 역할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계몽된 이타주의적 경향에 주목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및 직업별 복지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11]. 2000년대 이후 복지태도 연구는 사회계층 또는 계급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왔다[2, 14, 17, 8, 13, 10]. 전반적으로 계급 또는 계층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계량 분석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2010년 이후의 연구결과들은 저소득층의 친복지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태도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연구주제는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 또는 계급정치적 약화에 따른 탈계급적론과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화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2, 14, 1].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에 기반 한 연구들[14, 2, 8]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와[16, 19, 15, 3, 4, 5, 18] 달리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복지제도의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구중간계급이 노동계급보다 국가의 복지개입을 선호하거나 또는 경제적 계급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에 의해 매개되거나 또는 심지어 굴절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소위 이해관계 가설이 주목하는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연령이다.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집단은 노령연금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복지수요를 보이며 따라서 복지확대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7]. 다음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여주는 육체노동계층, 저소득층, 실업자, 그리고 은퇴자 집단 역시 유사한 이유로 사회복지 확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12, 18, 5].

복지태도는 정치적 지향 측면에서도 연구되어 왔다. 좌파지향적(leftist)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파지향적 가치에 비해 보편적 복지와 높은 수준의 국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잉글하트가 이름 붙인 물질주의적 가치[6]를 가질 경우 타인의 복지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 자신의 물질적 행복의 추구를 지향하며 따라서 보편지향적인 국가개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2019년 14차년도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0세에서 80세까지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미응답자를 제외한 1,982명이다.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 과표집되어 있음으로 인해 모든 분석에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이며 조사 문항 가운데 사회서비스 대상을 묻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선형회귀분석 모형에 투입되었으며 이들 독립변수들은 사전 문헌 검토를 통해 몇 개의 큰 범주들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주에는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포함되었다. 둘째, 응답자의 계층적 특성과 복지 지위 범주는 ‘장애관정 여부’와 ‘저소득층 여부’, 그리고 ‘가처분 소득 수준’이 포함되었다. 셋째,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된 범주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 ‘정치에 대한 일반적 관심 정도’, 그리고 ‘한국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넷째, 세금과 관련된 응답자태도에 대한 범주의 변수는 ‘복지위한 증세’, ‘조세 형평성’, ‘고소득층 세금수준’, ‘중산층 세금 수준’, 그리고 ‘저소득층 세금 수준’ 등에 관한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은 무상복지에 대한 태도 변수들이다.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변수 기술 통계
Table 1.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성별	0) - 1)*	n.a	n.a
연령대	1) - 6)**	3.26	1.32
장애관정	0) - 1)***	n.a	n.a
교육수준	1) - 6)****	2.78	1.11
저소득층	0) - 1)*****	n.a	n.a
가처분소득	1) - 6)*	3.57	1.43
정치적 성향	1) - 5)**	2.88	.86
정치상황 만족	1) - 5)***	4.05	.88
정치에 대한 관심	1) - 5)****	3.35	1.00
복지위한 증세	1) - 5)*****	3.88	1.57
세금 공정성	1) - 7)*	2.23	1.18
고소득층 세금수준	1) - 5)**	3.96	.88
중간층 세금수준	1) - 5)***	2.73	.74
저소득층 세금수준	1) - 5)****	2.60	.80
한국의 소득격차	1) - 7)*****	1.82	.67
대학까지 무상교육	1) - 5)*	3.12	1.15
무상보육	1) - 5)**	2.27	.96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추가되는 변수로 인한 R² 증가분은 새로운 예측변수(들)의 설명력 기여 정도를 나타낸다. 문헌검토를 통하여 모형에 투입될 독립변수들을 파악 한 다음 총 다섯 개의 모형 구축을 통해 독립변수(들)를 위계적으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투입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 .05에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 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할 때 응답자의 성별은 보편주의 복

- * 0) 여성, 1) 남성
-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 *** 0) 비장애인 집단, 1) 장애관정 집단
- **** 1) 중졸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전문대학 졸업 이하, 4) 대학교 졸업, 5) 대학원 석사, 6) 대학원 박사
- ***** 0) 저소득층 가구, 1) 비저소득층 가구
- * 1) 2000만원 이하, 2) 2000 - 4000만원 미만, 3) 4000 - 6000 만원 미만, 4) 6000 - 8000만원 미만, 5) 8000만원 이상
- ** 조사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 *** 조사문항은 “귀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4) 다소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 **** 조사 문항은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1) 매우 관심, 2) 상당히 관심, 3) 다소 관심, 4) 별로 관심이 없음, 5) 전혀 관심이 없음
- ***** 조사 문항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 * 조사 문항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잘 모르겠음, 4) 그렇지 않음, 5) 매우 그렇지 않음
- ** 조사 문항은 “귀하는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절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 조사 문항은 “귀하는 중간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절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 조사 문항은 “귀하는 저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지나치게 높음, 2) 꽤 높음, 3) 적절한 편임, 4) 꽤 낮음, 5) 너무 지나치게 낮음
- ***** 조사 문항은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범주는 7점 척도이며 1) 매우 평등, 7) 매우 불평등만 제시되어 있다.
- * 조사 문항은 “대학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 ** 조사 문항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 매우 동의, 2) 동의, 3)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음, 4) 반대, 5) 매우 반대

지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선별주의적 복지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장애판정여부의 경우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집단이 장애판정을 받은 집단에 비해 보편주의적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해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R^2 값 증가분은 모형의 설명력이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 여부'와 '가처분소득'을 통해 파악한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으로 저소득층이 보편주의를, 경제적 지위가 상승할수록 선별주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자료 분석의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는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관련 변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모델 2 대비 R^2 값 증가분은 모형3의 설명력이 충분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지향 관련 변수들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여부'와 '가처분소득' 등의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 역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는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는 모형 3에 세금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련 변수들을 추가한 것이다. 모델 3 대비 R^2 값 증가분은 모형4의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복지위한 증세'와 '세금 불공정성', 그리고 '중산층의 세금 수준' 등은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 그리고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역시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는 모형 4에 한국사회 불평등 정도 인식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모델 4 대비 R^2 값 증가분은 모형5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추가로 투입된 모든 변수는 응답자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4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던 연령대와 장애판정여부, 응답자의 정치적 지향, 복지증세, 세금불공정성, 그리고 중산층 세금 수준 등은 통계적 유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대와 정치적 지향의 효과가 모형 5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 본 결과,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변수의 효과 크기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세금 불공정성, 복지위한 증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총 5개의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복지태도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 모형에 순차적으로 투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 변수는 소위 '사회화가설'에서 복지태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바, 이번 분석의 결론은 다소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이 응답자들의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결과 역시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분석결과의 해석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복지위한 증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정치적 지향 등의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나 방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특히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태도는 어찌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과 액면 및 구성타당도 측면에서 공유하는 측면이 많을 것을 생각된다.

표 2.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 결정요인 분석
Table 2. Determinants of Universalism vs Selectivism Welfare Attitudes

	1			2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58		12.20***	2.58		10.56***	2.52		7.46
성별	-.02	-.01	-.45	-.02	-.01	-.40	-.01	-.00	-.18
연령대	.05	.06	2.34**	.05	.05	1.96**	.05	.06	2.04**
장애판정	.27	.05	2.05**	.35	.06	2.30**	.39	.06	2.40**
교육수준	-.01	-.01	-.37	.00	.00	.02	.00	.00	.031
저소득층 가치분 소득				-.03	-.01	-.32	-.11	-.02	-.95
정치적 성향 정치상황 만족 정치에 대한 관심				-.01	-.01	-.60	-.03	-.03	-1.10
F	5.47**			5.55**			10.88**		
수정된 R 제곱	.06			.07			.18		
R 제곱 변화량				.01			.11***		
N	1747			1463			1358		

	4			5		
	b	β	t	b	β	t
상수	2.00		4.57	1.54		3.50
성별	-.00	-.00	-.11	-.00	-.00	-.03
연령대	.06	.06	2.10**	.02	.02	.91
장애판정	.34	.05	2.00**	.33	.05	2.02**
교육수준	.02	.02	.76	.01	.01	.37
저소득층 가치분소득	-.06	-.01	-.52	-.12	-.03	-.97
정치적 성향	-.02	-.03	-.98	-.04	-.05	-1.75
정치상황 만족	.06	.04	1.98*	.04	.03	1.23
정치에 대한 관심	-.03	-.02	-.97	-.02	-.01	-.61
복지위한 중세	.01	.00	.31	.00	.00	.09
세금 공정성	.06	.08	2.92**	.05	.06	2.23***
고소득층 세금수준	-.06	-.06	-2.30**	-.09	-.08	-3.03***
중간층 세금수준	-.02	-.02	-.69	-.06	-.01	-.40
저소득층 세금수준	.11	.06	2.33**	.10	.06	2.21***
한국의 소득격차 대학까지 무상교육 무상보육	.02	.01	.65	.01	.01	.39
F	23.52***			24.88***		
수정된 R 제곱	.23			.27		
R 제곱 변화량	.05***			.04***		
N	1298			1274		

* $p < .1$, ** $p < .05$, *** $p < .001$

V. 결론

이 연구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다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보면,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많은 변수들이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정치적 지향’이나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의식 관련 변수들에서 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기존 복지태도 연구들에서 강건한(robust) 효과를 보여 온 변수들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분명 사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판정 여부’ 변수의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는 장애판정 집단들이 스스로 표출한 자신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가운데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은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보수와 진보 진영은 각자의 패러다임과 논리를 통해 논쟁에 임해왔고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온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구분은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는 전체에 이 연구는 기반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유의하게 설명 및 예측하고 있는 변수들의 상당수가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태도를 설명해 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측정상의 오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연구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인이 보이는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구분은 학습 또는 경험된 논리나 의식의 차원이 아닌 정치적 구호나 수사(修辭)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회정책 영역에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미 논의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은 외형적으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은 보편주의의 현실 적용의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의 경우 보편주의적 급여로의 전환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

고 기초연금과 같은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을 걸러내는 사회정책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논란의 지점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것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급여 지급을 보편주의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에서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강단 학자들 중심의 이념형적 차원과 현실 정치인들의 현실 정치투쟁의 장(場)을 제외한 실제 사회정책이나 제도 구현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치사회적 의식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변수 또는 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들이 ‘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앞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으나 이 외에도 종속변수 측정의 문제나 조사연구 시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지태도로서 보편주의나 선별주의는 현실에서 대응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념형에 가까우며, 오히려 정치적 수사나 구호로서 소모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가 사회정책 구성의 개념적 원리로서 실제 제도나 정책의 생산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실제 조사에서 제대로 측정해 낼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가 순수 이념형적 도구에 불과하거나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면 복지태도로서 보편주의나 선별주의 개념이 실증 분석의 영역에서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개념은 공허하다.

References

- [1] Ahn Sangho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o-Welfare Attitudes and Path Structure. *Korean Social Policy*, 16(1):163-192. 2009.
- [2] Cho Donmoon. The Effects of Class and Public Private Division upon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The Journal of Industrial Labor*, 7(1):157-191. 2001.
- [3] Esping-Anderson, G. *Politics against Market: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4] Esping-Anderson, G.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5] Hansenfeld, Y. · J. A. Raffert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1027-1048. 1989.
- [6] Inglehart, R · Abramson, P.R. Measuring Post materi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665-677. 1999.
- [7] Iversen, T · Soskice, D. An Asset Theory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4):875-893. 2001.
- [8] Ju Ennseon, Baek Jeongmi. The landscape of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34(3):203-225. 2008.
- [9] Kim Shinyoung.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State's Public Responsibility. *Survey Research*, 11(1), 2010.
- [10] Kim Soowan et al. A Study on the Preferences of Korean People toward Welfare Policy: Focusing on Growth and Distributio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Journal of Social Security*, 30(2):67-90. 2014.
- [11] Kim Young Mo. A Review on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13:5-17. 1991.
- [12] Koster, Ferry. Globalization, Social Structure, and The Willingness to Help Other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26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4):537-551. 2007.
- [13] Lee Hoonhee et al.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and Health Insurance, *Journal of Social Security*, 27(2): 1-25. 2011.
- [14] Lee Sunggyun.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Korean Sociology*, 36(2): 205-228. 2002.
- [15] Mishra, R. *The Welfare State in Crisis: Social Thoughts and Social Changes*. Harvester Press. 1984.
- [16] Pampel, F.C. · J. B. Williamson. *Age, Class,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Press. 1989.
- [17] Ryu Jinseok. The Micro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Attitudes, *The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56(4):79-101. 2004.
- [18] Svallfors, S.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119-138. 2004.
- [19] Therbon, G. Welfare State and Capitalist Market. *Acta Sociologica*, 30: 237-254. 1987.